

케인즈의 社會思想과 今日의 不況

金 秀 行*

〈目 次〉

- I. 머리말
- II.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 III. 경제체제에 대하여
- IV. 국가에 대하여
- V. 맺는말

I. 머 리 말

금일의 세계적 대불황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산활동이 정체를 계속하고, 대규모의 실업은 감소하지 않으며, 국제적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정치면에서는, 보수적인 사회세력이 국가기구를 장악하여, 「복지사회」의 여러 제도들을 해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냉전의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 사상이 새로운 부활을 보아, 실업 및 빈곤을 사회의 문제로 삼기 보다는 그 당사자의 개인적 문제로 간주하려고 한다.

불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금일의 사회는, 불황이 결코 경제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충분히 깨닫고 있다. 만약 불황이 (임금결정에 있어서나 생산과정의 통제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경제적 세력의 증대와, 이에 따른 이윤의 하락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다면, 불황의 극복은 경제·정치·사상 면에서의 상당한 대립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고, 불황을 극복한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는 다른 상황을 띠게 될 것이다.

불황과 불황극복의 대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을 넓혀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케인즈의 사회사상도 이러한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케인즈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양차 대전 사이의 영국경제의 불황(특히 실업)을 해명하고 그 극복대책을 제시하는 일에 그의 학문적·정치적 활동의 대부분을 바친 사람이

* 한신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신랄한 논평을 해 주신 한신대학의 박영호박사와 정운영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다. 그러나 그의 이론과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평가가 있다.

힉스에 의하면, 케인즈의 시대는 사실상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의 이론과 정책이 1930년대의 불황을 극복하는 데 공헌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대전 후의 장기번영이 어느 정도로 케인즈식의 정책에 힘입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힉스는 말한다.⁽¹⁾

한편, J. 로빈슨에 의하면, 케인즈는 「지금 당장(here and now)」의 문제로서의 실업의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지, 장기간의 완전고용이 야기시킬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전후 각국 정부가 케인즈식의 완전고용정책을 추진한 것은,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계획경제체제와의 대항의식 때문이었다고 로빈슨은 말한다.⁽²⁾

케인즈 경제학이 성공적인 불황의 학문체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경제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회사상이며, 이것이 금일의 불황과 그 불황대책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그의 사회사상을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상, 경제체제에 대한 사상, 국가에 대한 사상 등으로 구분한다. 물론 이러한 사상은, 케인즈 자신이 가진 영국경제관(「재생시킬 투자기회는 없어지면서 옛날 풍요할 때의 저축습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동맥경화증에 걸린 경제」⁽³⁾)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사회사상이 금일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그의 사상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부분에서는, 케인즈가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을 분류하고 특징지우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사상이 금일의 불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마르크스의 사상을 대비시켜 볼 것이다. 금년이 마르크스 사후 100주년이라는 점 이외에도, 그의 사상은 케인즈의 사상과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금일의 불황을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대한 케인즈의 사상을 다룬다. 그가 인식한 자본

(1) J. Hicks, *The Crisis in Keynesian Economics*, Basil Blackwell, 1974, pp.1-3. 다음의 글에도 비슷한 주장이 있다. B. Sutcliffe, "Keynesianism and the Stabilization of Capitalist Economics," in F. Green and P. Nore, eds., *Economics: An Anti-text*, Macmillan, 1977; R. Matthews, "Why Has Britain Full Employment since the War?," *Economic Journal*, September 1968.

(2) J. Robinson,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in *Contributions to Modern Economics*, Basil Blackwell, 1978, p.6. 이 책에 있는 다음의 논문도 참조하라. "What Has Become of Employment Policy?"

(3) J.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1171.

주의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면서, 그 단점이 사회 자체 내의 힘에 의하여 해결되리라 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음을 상기시킬 것이다. 이 점에서 케인즈는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이행(historical transition)에 관한 사상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제 부분은 케인즈의 국가관을 다룬다. 사회구성원의 치부욕과 개인주의를 일정한 규율 하에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주장할 때, 케인즈는 과연 국가를 어떠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밝힐 것이다. 만약 국가를 실업해소의 사회적 기구로 파악하였다면, 금일의 국가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금일의 각국 정부는 「실업을 창조하는」 여러가지 정책을 꾸준히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교육·위생·사회 서비스 부분의 삭감, 재정·금융의 긴축정책, 국내기업의 다국적화 추진 등이 그것이다.

II.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케인즈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을 소비자, 투기가 및 기업가로 구분한다.⁽⁴⁾ 그들은 모두 치부욕과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지를 자기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⁵⁾

소비자는 소득이 오름에 따라 저축성향을 높이며, 투기가는 단기적인 투기이익을 노려 유가증권보유 혹은 화폐보유를 결정하며, 기업가는 이자율과 장래의 예상투자수익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고 케인즈는 본다.

한계소비성향, 유동성선호 및 자본의 한계효율은 사회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장래에 대처하는 행동양식을 파악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개념들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상 케인즈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약점」⁽⁶⁾인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불확실성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그는 말한다.

「이 시대의 주요한 경제적 폐해의 다수는 위협성, 불확실성 및 무지의 소산이다. 상황이나 능력에

(4) 이러한 구분은 그의 유효수요(=소비수요+투자수요)이론에 합치된다.

(5)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間宮陽介, 「モラル・サイエンスとしての經濟學：ケインズ神話の解釋」; 松原隆一郎, 「ケインズとハイエク：慣習論の系譜」. 두 글 모두 『季刊現代經濟』, 1983, No.52 (臨時増刊號), 에 있음.

(6) J. 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GT로 약칭할 것임)(1936),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VII, Royal Economic Society, 1973, p.372.

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특정의 개인이 불확실성과 무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심한 불평등 분배가 나타난다. 이것은 또한 대기업들이 때때로 투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더우기 불확실성과 무지에 대한 개인들의 이기적 반응 때문에, 유망한 기업들이 실패하여 실업을 발생시키고 능률과 생산을 저해하고 있다.»⁽⁷⁾

다시 말하자면, 케인즈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을 「노름꾼들」⁽⁸⁾로 간주하고, 노름꾼들의 요행에 따라 재산의 불평등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노름꾼들이 판돈을 거두어 들일 때, 실업과 유희설비가 발생한다고 본다.

더우기, 케인즈에 의하면, 불황의 발생과 회복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업가의 장래예상인데, 이것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기업가의 심리」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이자율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저수준까지 인하시키더라도, 자본의 한계효율이 너무나 폭락하여, 투자를 촉진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케인즈는 말한다.⁽⁹⁾

결국, 쉽게 풀이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불황은 기업가의 장래예상이 낙관에서 비관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비관론이 낙관론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불황은 계속된다고 케인즈는 생각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케인즈의 사상은,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주의에 맡겨 두면 실업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의 가정」⁽¹⁰⁾에 의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다는 생각은 여러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를 지적할 뿐이다. 투기가의 유동성선호로 이자율의 「소망스러운」 하락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본의 한계효율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 역할」에 비하면, 전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유동성선호의 급증은, 케인즈도 인정하듯이,⁽¹¹⁾ 자본의 한계효율의 폭락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유동성선호와 불황의 발생을 인과관계로 연결시키기가 어렵다. 결국 기업가의 장래예상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심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케인즈 마음대로 지금의 상태를 가정할 수 있다.

어느 경제학자는 케인즈의 불황이론과 태양흑점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물론 그 인과관계가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에서 차이가 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꼭 같다. 곧, 경

(7) J. M. Keynes, "The End of Laissez-faire" (1926), in *Essays in Persuasion* (EP로 약칭할 것임) (1931),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IX, Royal Economic Society, 1972, p. 291.

(8) G. Shackle, *Keynesian Kaleidics*,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74, p. 67.

(9) Keynes, *GT*, pp. 316-7.

(10) Schumpeter, *op. cit.* p. 1177.

(11) Keynes, *GT*, p. 316.

기순환을 자본주의 경제의 내부적 작용으로부터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설명하기 때문이다. 케인즈의 경우는 개별자본가의 기본에서 찾고, 태양혹절선은 태양혹점의 크기에서 찾는다. 그러나 자본가의 기본이 태양혹점의 크기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여도 케인즈의 이론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¹²⁾

결론적으로 말하면, 케인즈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을 소비자, 투기가 및 기업가로 구분하고, 그들의 자율적 심리와 행동의 변화에서 경제의 변동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회구성원들의 심리와 행동의 자율성이 사회 그 자체 혹은 사회적 과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 변화는 경제변동의 설명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장래의 전망이 비관적이면 기업가는 투자를 중단한다고 케인즈는 생각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윤추구와 경쟁⁽¹³⁾ 때문에 기업가는 「끊임 없이」 투자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윤추구와 경쟁은 모든 기업가들에게 기술혁신과 대량생산을 강제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경제변동론에 있어서는, 투자하려는 「의욕」보다는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의 「한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다.⁽¹⁴⁾

물론 이러한 차이는 추상도(level of abstraction)의 차이에서 유래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추상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의 기업가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추상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의 기업가의 행동만 관찰한다면, 기업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¹⁵⁾

투기가의 유동성선호(혹은 화폐의 퇴장)가 야기하는 악영향을 케인즈와 마르크스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전자는 투기가의 투기적 동기의 결과로 파악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화폐의 일반적 등가물(general equivalent)로서의 기능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물론 케인즈가 화폐의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기적 「동기」를 유동성선호에 결부시킴으로써 유동성선호의 객관적 의미를 충분히 개발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¹⁶⁾

마르크스에 의하면, 상품의 판매가 순조롭지 못하여 상업신용의 수단(및 주식)이 위협에

(12) Sutcliffe, *op. cit.*

(13) 케인즈의 치부욕과 개인주의에 대응하는 꼭 같은 개념이다.

(14) 김수행, 「현대 학문의 새 경향: 경제학 분야」, 『현상과 인식』, 1983년 여름호.

(15) 이것은, 마치 「자본은 평균이윤을 낳는 신비스러운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환상이, 추상수준이 낮은 생산·유통·분배의 총과정만을 연구할 때 생기는 것과 꼭 같은 이치이다. 김수행, "Fetishism of Capital at the Unified Process of Production, Circulation and Distribution," 『한신논총』, 한신대학, 1983.

(16) S. de Brunhoff, *Marx on Money*, Urizen Books, 1976, p. 41.

빠지면, 기업가(및 투기가)는 누구나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이자율의 상승과 신용제도의 파괴가 오고, 나아가서 상품의 투매 및 가격폭락 등으로 경제전체가 침체에 빠진다고 본다. 투기가의 심리를 개입시키지 않고서도, 유동성선호가 일으키는 악영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

금리생활자⁽¹⁷⁾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케인즈와 마르크스는 그 입장을 달리한다. 케인즈는, 유동성선호가 야기하는 악영향과 이자수입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리생활자의 안락사」⁽¹⁸⁾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금리생활자의 규모가 커질 것을 예상한다. 기업의 대규모화에 따라, 산업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본의 최소단위가 상승하면, 이 최소단위에 미달하는 자본은 신용제도(은행 및 주식시장)를 통해 기업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신용제도의 발달에 따라 자본의 집중이 촉진되고, 생산규모의 증대와 이윤창출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산업이윤이 이자와 기업가이윤(profit of enterprise)으로 분할되는 과정에 개재되는, 대부자본가와 산업자본가 간의 이해대립을 마르크스는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경기순환 중의 이자율과 이윤율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그는 공황이 발발하는 시점에서는 최고의 이자율과 최저의 이윤율이 공존하며, 경기회복기에서 호황기까지 단 낮은 이자율과 높은 이윤율이 공존한다고 말한다.⁽¹⁹⁾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케인즈는 사회구성원 특히 기업가의 심리변화에서 경제변동의 원인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황으로부터의 회복도 장래에 대한 기업가의 낙관론의 소생에서 구하고 있다. 한편, 마르크스는 기업가를 끝없는 이윤추구와 치열한 경쟁의 와중에 있는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가의 심리변화에는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불황 속에서도 기업은 새로운 이윤추구의 방법을 계속 모색한다고 본다.

이 두가지의 접근방법 중 어느 것이 금일의 기업의 불황대책을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을까?

낮은 이윤율과 도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감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불황기에 (곧, 대규모의 실업이 존재하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수준에 있는 시기에) 여러 산업에서는 노동절약적인 신기술의 도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 유희설비와 실업자가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은행과 기업은 해외에 투자하여 국내의 고용과 산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17) 금리생활자는 화폐자본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주식의 소유자까지도 포함한다.

(18) Keynes, *GT*, p. 376.

(19) K. Marx, *Capital*, Vol. III, Penguin Books, 1981, Ch. 30.

기업은 조세에 대한 저항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케인즈의 기업가론은 매우 불충분하다. 기업가의 심리에 관한 연구보다는 이윤추구의 방법과 거기에 내재하는 갈등에 관한 연구가 더욱 적합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²⁰⁾

III. 경제체제에 대하여

케인즈는 치부육과 개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이들에 일정한 제한과 규율을 가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느 사회체제보다 더욱 자유롭고 능률적인 사회」가 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케인즈는 프리드만 및 하이예크와 비교할 때 「대립면보다는 공통점이 더욱 크다.」⁽²¹⁾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케인즈는 사회주의 혁명 후의 러시아를 방문한 뒤에 쓴 글⁽²²⁾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강조한다. 곧, 사회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치부동기의 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치부 자체가 성공의 지표가 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적 안정이 모든 활동의 주요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러시아 사회를 다음과 같이 찬양한다.

「레닌주의의 감정적 윤리적 핵심은 치부육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인간의 성격을 변경시키고 있다든가, 변경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새로운 이상을 수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구조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사회구조 안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자극하는 치부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며, 성공의 사회적 기준이 달라질 것이고, 종전에는 정상적이고 존경받던 행동이 더 이상 그렇게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 러시아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서구사회의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³⁾

그러나, 러시아의 공산주의나 독일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는 「능률과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케인즈는 비판한다.⁽²⁴⁾

(20) 불황시에 노동절약적인 신기술이 도입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실업의 증대로 노동조합의 세력이 약화된 불황시에는, 노동절약적인 신기술의 도입이 용이하다. 시장규모가 격감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불황시에는, 단위당 상품의 가격인하가 급선무이다.

(21) 早坂忠, 「ケインズの社會思想と國家觀」, 『季刊現代經濟』, 前掲號.

(22) Keynes, "A Short View of Russia" (1925), *EP*.

(23) *Ibid.*, pp. 259-60, 270.

(24) 케인즈는 자기의 이론이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더욱 잘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렇기 때

다시 말하자면, 치부육과 개인주의는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케인즈는 생각한다⁽²⁵⁾. 곧, 치부의 동기와 사유재산의 제도는 인간의 유용한 활동들을 최고도로 성취시키는 데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그것은 인간의 위험한 성향들이 개인적 권위의 추구나 잔인한 행동의 방향으로 발산되는 것을 막고, 비교적 무해한 것(예를 들면 은행계정의 관리)에 집중하도록 한다. 한편 개인주의는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결정 및 책임의 분산에서 연유한다. 또한 개인주의는 개인적 선택의 폭을 넓혀 인생의 다양성을 보호함으로써, 미래를 개선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곧, 인생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결국, 케인즈는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을 살려 그 체제를 유지 보존시키기 위하여, 치부육과 개인주의에 일정한 규율과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특히 그는 주식회사제도의 발달로 개인적 이윤동기가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본다.

「자본의 소유자(곧, 주주)는 경영으로부터 거의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윤추구에 있어서의 경영자들의 직접적 개인적 관심은 전혀 이차적인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경영자들은 주주를 위한 최대한의 이윤보다는 그 회사의 일반적 안정과 평판을 더욱 고려하게 된다.」⁽²⁶⁾

이처럼 「대기업의 사회화」 현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내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구가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케인즈는 국가 기구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investment)」⁽²⁷⁾를 주창한다. 곧, 완전고용과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기구는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으로 국민의 소비 성향과 투자유인을 유도하거나 직접적인 투자활동으로 「최적의 투자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어느 사회보다도 훌륭한 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체제관은 어떠한가?

케인즈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곧, 변명적인) 사상에 몰두한 데 반하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그 자체 내의 힘에 의하여 변동하여 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

후자에 의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동력(motive power)은 자본가들의 끊임 없는 이윤추구와

문에 자기의 이론을 『일반』이론이라고 부른다.」는 구절이 1936년의 독일어판 『일반이론』의 서문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지금의 *GT*에는 보이지 않는다. B. Schefold, "The General Theory for a Totalitarian State?: A Note on Keynes's Preface to the German Edition of 1936,"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April 1980.

(25) Keynes, *GT*, pp. 374, 380.

(26) Keynes, "The End of Laissez-faire," *EP*, p. 289.

(27) Keynes, *GT*, p. 378.

그것에 관련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이다. 계급투쟁의 의의는 반드시 자본주의 체제의 파괴와 관련있는 것만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정도로까지 심화되지 않도록, 자본가들이 양보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하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본다.

노동시간의 연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기계의 도입을 촉진하였고, 임금의 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높은 생산성의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참정권 획득이 사회 전체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분석한다. (28) (29)

케인즈는 주식회사의 발달을 공공의 이익 증진과 관련시키고 있지만, 마르크스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무기한의 자금」을 사회 전반에 걸쳐 동원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개별자본가의 소유가 아닌 사회적 자본이며, 이 점에서 개별자본가의 사회적 기능이 사실상 약화내지는 불필요하게(redundant)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추구에 필요한 대규모의 고정자본설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작된 주식회사는, 아무리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윤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마르크스는 경영자를 자본의 「대리인(agent)」에 불과하다고 본다. (30)

주식회사의 발달에 의한 「자본의 사회화」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관계를 약화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의 협동적 성격의 강화(곧, 「노동의 사회화」)는 노동의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관찰한다.

끝으로, 케인즈는 국가의 개입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았지만, 마르크스는 노동자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으로 새로운 사회(거대한 생산능력을 활용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하는 사회)가 출현할 것을 전망한다. (31)

(28) K. Marx, *Capital*, Vol. I, Penguin Books, 1976, Pts. III and IV.

(29) 물론,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양보는 일정한 한도를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그 한도를 넘는 요구는 이윤추구의 능력을 제한하여 불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본다.

(30) M. de Vroey, "A Marxist View of Ownership and Control," in T. Nichols, ed., *Capital and Labour*, Fontana Paperbacks, 1980.

(31) 경제적 공황이 사회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의를 케인즈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IV. 국가에 대하여

케인즈는 실업(및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국가의 능력과 국가정책의 추진세력에 관한 그의 사상이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그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케인즈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심리와 행동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는 「개인 간의 소득이전에 불과한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³²⁾ 자본의 한계효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장기적 안목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³³⁾

따라서 국가는 투자를 완전고용의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면서, 개인주의의 기초원리에 대하여 여러가지의 비판을 가한다.

「개개인이 그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법적인 『자연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소유주나 취득자에게 영구적 권리를 부여하는 『협약』은 없다.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항상 일치하도록,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은 일치되고 있지 않다. 계명편(enlightened) 이기심이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용한다는 것은 경제학원리로부터의 올바른 추론이 아니다. 이기심이 일반적으로 계명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표를 자자가 추구하는 경우 그 개인들은 너무나 무식하거나 연약하여 자기 자신의 목표까지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³⁴⁾

결국, 케인즈에 의하면, 개인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국가는 사회적 이익 혹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³⁵⁾

그런데 국가의 여러가지 기구들(의회, 정부의 각 부처, 중앙은행 등)은, 「기존이익(vested interests)」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기 보다는, 그 기구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ideas)」에 의하여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케인즈는 생각한다. ⁽³⁶⁾

따라서 국가의 경제정책이 실업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넓은

(32) Keynes, *GT*, p.158.

(33) *Ibid.*, p.164.

(34) Keynes, "The End of Laissez-faire," *EP*, pp.287-8.

(35) 사회적 이익 혹은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분명하지가 않지만, 케인즈는 개인적 이익의 합계가 사회적 이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塩野谷祐一, 「ケインズの道德哲學」, 『季刊現代經濟』, 前掲號. 나의 견해로는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해소를 사회적 이익이라고 보았다고 말하고 싶다.

(36) Keynes, *GT*, pp.383-4.

지식]에 사로잡힌 정치가와 관료들 때문이지, 결코 어떤 이익집단이 실업을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따라 케인즈는, 「지식인들이 무식한 투표자들에 의해 선출된 의회나 정부의 위에 서서」 국가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⁷⁾ 또한 이를 위하여 「반자율적인 기구들(semi-autonomous bodies)」을 설치하여 국가의 임무를 위임하기를 권고한다.⁽³⁸⁾

국가 기구들은 특정한 이익집단의 당파적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 무사한 「지식귀족」이 국가기구를 장악해야 한다는 사상은 케인즈의 고정관념(second nature)에 지나지 않는다.⁽³⁹⁾ 어떻게 하여 지식인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

물론 케인즈는 그 당시의 정부가 경제문제의 해결에 속수무책인 것에 많은 실망을 하였으며 국가가 사회적 이익(곧,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해소)의 증진에 사실상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지식인의 정치 개입을 주창한 것으로 보인다.

왜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해소가 사회적 이익이 된다고 케인즈는 생각하였는가? 이것만이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양차 대전 사이의 영국사회는 「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에 대한 현실적 대체물」을 만들어내야 할 단계에 있다고 케인즈는 보았다.⁽⁴⁰⁾ 영국경제의 침체 및 대량실업과는 대조적인 사회주의 러시아의 급속한 성장, 케임브리지 지식인들의 좌경화,⁽⁴¹⁾ 노동운동의 격화⁽⁴²⁾ 등을 목격한 케인즈는, 실업의 해소와 소득분배의 균등화를 통하여 「사회정의」와 「사회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소비성향과 투자유인을 조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은, 19세기의 시사평론가나 급일의 미국금융인의 눈에는 개인주의에 대한 엄청난 철퇴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지금의 경제형태의 전면적 파멸을 회피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며, 또한 이것이 개인의 독창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기능의 확대를 주창한다.」⁽⁴³⁾

(37) Keynes, "Am I a Liberal?" (1925), *EP*, p. 295.

(38) *Ibid.*, pp. 301-2; "The End of Laissez-faire," *EP*, pp. 288-291.

(39) R. Harrod, *The Life of John Maynard Keynes*, Penguin Books, 1972, p. 226.

(40) Keynes, "Am I a Liberal?," *EP*, p. 304.

(41) 「우리들은 우리들의 후배들을 보호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이론(곧,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대체물)을 제공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케인즈는 자탄한다. Keynes, "My Early Beliefs" (1938), in *Essays in Biography,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X, p. 446.

(42) 1926년에 최초의 총파업이 있었다. S. Pollard, *The Development of the British Economy 1914~67*, 2nd ed., Edward Arnold, 1969, Ch. 5.

(43) Keynes, *GT*, p. 380.

『일반이론』의 마지막 제24장(“Concluding Notes on the Social Philosophy towards Which the General Theory Might Lead”)은 사실상 케인즈가 『일반이론』을 쓰게 된 동기를 소개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enquiry)의 순서와 서술(presentation)의 순서가 다르지 않을 수 없어, 마지막의 장으로 밀려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이론』의 동기는,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할 급박한 시기에,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조치들을 불세비즘으로 간주하고 있는」⁽⁴⁴⁾ 지도자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곧,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소득분배를 평등화시키면 소비성향이 제고되어 투자 및 소득이 증가한다든가, 정부의 금융정책에 의해 이자율을 인하시키면 이자수입의 감소와 투자의 증대가 나타난다든가, 불황은 수요부족에서 기인하는데 당장에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적자지출 뿐이라는 것 등이 그것이다.

요약하면, 케인즈는 국가를 「사회적 이익」의 옹호자로 보며, 실업의 해소와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사회적 이익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케인즈의 국가관과 경제정책은 사회민주주의의 발달을 크게 도왔다.⁽⁴⁵⁾ 왜냐하면 그의 사상은 평등주의의 팽창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⁴⁶⁾ 진보적인 관료와 기업가 및 노동조합을 연합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일의 불황에 대처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케인즈의 관점에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금일의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소득세의 누진율을 인하함으로써,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실업을 창출하고 있다.

금일의 국가는 고금리정책을 채택하여 기업다수를 도산시키고 있다.

금일의 국가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제하고, 임금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일의 국가는 실업의 해결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진정화를 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고,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을 임금의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금일의 국가는 자본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며 이에 따라 국내의 산업과 고용은 타격을

(44) Keynes, “Am I a Liberal?,” *EP*, p.299.

(45) P. Lambert, “The Social Philosophy of John Maynard Keynes” (1963), in J. Wood, ed., *John Maynard Keynes: Critical Assessments*, Croom Helm, 1983; J. Grahl, “The Liberal Revolutionary,” *Marxism Today*, June 1983.

(46) 케인즈 이전의 평등주의자는, 소득분배의 평등화가 모든 점에서 옳은 일이지만, 저축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하나의 점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케인즈는 저축증대가 실업을 가져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평등주의는 크게 팽창할 수 있었다. Schumpeter, *op. cit.*, p.1171.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경제개입을, 「낮은 지식」에 사로잡힌 정치가의 무지의 소치로 본다든가, 특정한 이익집단의 당파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든가,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그 최대의 과제이다.⁽⁴⁷⁾ 이 점에서는 케인즈도 「사실상」 공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케인즈가 불황의 해소만이 체제의 유지에 공헌한다고 본 것과는 달리, 마르크스의 입장에서는 불황을 악화 또는 지속시키는 것이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하는 경우가 있음을 본다.⁽⁴⁸⁾

예를 들면,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능률이 낮은 기업을 정리 도산시키고, 능률적인 기업으로 자본을 집중시키는 것이 경제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국가의 고급리정책이나 재정적 긴축정책은 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가지의 예는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실업을 창출하는 경우이다.⁽⁴⁹⁾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는 물론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그 일차적 목적이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은 공공부문에서의 실업증대는 노동조합 전체의 투쟁력을 약화시켜 신기술의 도입과 임금인상율의 저하를 용이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는, 케인즈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로지 실업의 해소와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며,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불황의 진정화에만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자본의 축적과정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그 애로 요인을 제거시키려고 노력하며, 이에 따라 불황을 당분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경제적 불황이 체제적 위기에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새로운」 사상(예를 들면, 프리드만의 경제사상)의 전파에 노력하게 된다.⁽⁵⁰⁾

V. 맺 는 말

이상에서 케인즈의 사회사상을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상, 경제체제에 대한 사상 및 국가에 대한 사상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의 사회사상은 양차 대전 사이의 영국 사회를 기

(47) B. Jessop, *The Capitalist State: Marxist Theories and Methods*, Martin Robertson, 1982, Ch. I.

(48) B. Fine and L. Harris, *On the Problem of Analysing Current Economic History*, mimeo.

(49) A. Glyn and J. Harrison, *The British Economic Disaster*, Pluto Press, 1980.

(50) G. Therborn, *The Ideology of Power and the Power of Ideology*, New Left Books, 1980.

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과 경제체제에 대하여 오히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처부육과 개인주의가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강조되었고,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진화시켜 온 동력이라는 측면은 간과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경제의 외부로부터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소비자, 투기가 및 기업가와와는 전혀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국가(지식인의 통치기구)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입해야 한다고 케인즈는 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회사상은 금일의 불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불황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노동절약적 신기술의 도입, 노동규율의 강화, 임금상승의 억제 등), 자본의 재구성(restructuring of capital)을 위한 국가의 개입(고금리정책에 의한 비능률적 기업의 정리, 기업집중의 허용 등),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등은 기업가 및 국가에 대한 케인즈식 사고방식으로서의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케인즈에 의하면, 기업가는 장래에 대한 비판 때문에 불황기에는 투자를 중단하며, 국가는 항상 실업의 해소와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케인즈와는 달리, 마르크스는 기업가를 「인격화된 자본(personified capital)」으로 보고, 기업가는 호황과 불황을 가리지 않고 「능력」이 있는 데까지 이윤추구를 위하여 투자를 계속한다고 본다. 또한 그는 국가의 경제개입은 자본축적의 촉진을 위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형태는 당시의 경제상황과 경제투쟁에 참여한 세력 간의 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윤추구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자본과 노동 간의 대립, 자본 간의 경쟁 등이 불황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재구성되며, 이러한 대립의 집결지인 국가는 대립세력 간의 힘관계를 고려하면서 불황이 자본축적의 새로운 강장제가 되도록 유도한다.

금일의 불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케인즈의 사회사상 보다는 마르크스의 그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¹⁾

(51) 김수형, *Theories of Economic Crises: A Critical Appraisal of Some Japanese and European Reformulations*, Ph.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1982.